

학점은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 방안

오 성 삼 / 건국대 농업교육과 교수, 사회교육원장

학점은행제는 '98년 봄학기부터 최초로 실시되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다. 즉, 실시기관 선정에 따른 문제, 저조한 지원을,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의 재정적 부담, 교과목 연결 체계의 미흡, 기관마다 다른 수강료 등이 그것이다. 또한 시행기관수의 부족, 개설 교과목 부족, 졸업까지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예상되는 문제점이다.

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말 강의나 계절학기제 도입, 실시기관의 컨소시엄 형태 운영, 유연한 운영체제 확립 등이 요구된다.

1. 들어가는 말

5·31 교육개혁 과제의 하나로 실시된 '학점은행제'는 누구나, 언제, 어느 곳에서건 원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의 사회교육원은 물론 대학 밖의 각종 사회교육기관의 프로그램 및 교과목 상호간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따라서 적령기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직장인이나 과거 대학을 다니다 중도 포기한 자, 그리고 대학 졸업장은 없지만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실력을 갖추고 있는

직장인 등 다양한 욕구와 동기를 지닌 대상에게 문호를 폭넓게 열어 놓고 있다. 금년 봄 학기부터 실시되고 있는 이 제도는 학습자들이 다종다양한 사회교육 기관에서 취득한 학습 경험을 학점화하여 학점은행본부(한국교육개발원내)에 등록하고, 틈틈이 취득한 학점들이 누적되어 140학점을 넘으면 대학 졸업 학력을, 80학점 이상이면 전문대학 졸업 학력을 인정받는 제도인 것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대부분의 제도들이 그러하듯 학점은행제 역시 그 동안의 준비 과정을 통해 '98년 봄

학기에 최초로 실시되면서 시행 초기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 몇몇 제기되는 문제들을 짚어보고, 아울러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들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학점은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1) 실시 기관 선정에 따른 문제

현재 전국적으로 학점은행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표 1>과 같이 61개 기관으로 집계되어 있다. 지난 연말 학점은행제의 실시를 앞두고 전국의 각 대학 부설 사회교육원들을 비롯한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원, 사설학원, 어학원 등의 각종 사회교육원들 가운데 일정 자격 기준을 충족한 기관들이 학점은행제 시범 실시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대학의 사회교육 기관과 관련하여 이같은 학점은행제 시범 실시기관을 선정하는 데 결정적인 잣대가 된 것은 각 기관의 설립 연도였다. 7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해당 교과목 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들에 한해 신청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당시 많은 대학부설 사회교육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일선 사회교육원들의 주장은 설립 연도보다는 시설과 교수진 등 각종 여건에 대한 평가에 근거를 두고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교육부의 입장은 전국 164개나 되는 그 많은 대학 사회교육원들을 짧은 기간 내에 평가한다는 일이 어렵고, 또 시범 실시 기간이 끝나면 점진적으로 그 기관수를 확대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대학 사회교육원들이 머지않아 학점은행제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

(표 1) 학점은행제 시범운영 기관 현황

(’98년 1학기 현재)

기관 형태	해당 기관수
○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건국대 사회교육원 외 24
○ 대학부설 전자계산원	동국대 전자계산원 외 2
○ 고등기술학교 전공과	충신예술고등학교 외 2
○ 특수학교 전공과	대전맹학교 외 1
○ 상공회의소 직업훈련원	육천직업훈련원 외 1
○ 직업전문학교	경민직업전문학교 외 1
○ 학원(어학원)	시사영어학원 외 4
○ 다지인·패션계 학원	강남국제복장학원 외 4
○ 정보처리 전자·전기계 학원	부산정보처리학원 외 4
○ 기타 기술계 학원	제일 열관리기술학원 외 5

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어느 쪽의 주장이 옳았건 간에 교육부의 기준대로 현재 학점은행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표 1>과 같이 전국 61개 기관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학습자들 대부분이 현업에 종사하는 성인들이라는 점에 비추어 인구 비례에 따른 지역적인 안배가 선행되어야 했는데, 이같은 배려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학습자들의 학습 기회 포착이 어렵게 된 것이다. 열린 교육과 평생 학습 체제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관 선정 과정에서 설립 연도나 기관 형태에 따른 배분보다는 인구 비례의 지역간 균등 안배의 원칙이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향후 지역권별로 학점은행제 실시기관의 균형 있는 설치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조건이라 생각된다.

2) 저조한 지원율

또 다른 문제는 학점은행제 수강생들의 저조한 지원율이다. 시범 실시기관의 신청 단계부터 그 자격 기준을 놓고 교육부와 대학 부설 사회교육원들 간에 불편한 관계가

〈표 2〉 각 대학 부설 사회교육원 학점은행제 지원자 현황

('98. 4. 13 기준 교육부 집계)

기관명	교과목수	정원	현원
건국대	5	200	84
경원대	2	60	0
계명대	5	160	10
광운대	4	160	37
단국대(천안)	5	140	14
대구대	5	60	11
덕성여대	5	400	69
명지대	5	160	29
서강대	3	60	31
서원대	5	40	8
세종대	2	40	2
성균관대	5	120	58
수원대	5	80	29
숙명여대	4	0	0
영진전문대	2	60	46
인천교대	5	150	13
전북대	4	100	33
전주대	5	20	2
주성대	3	150	0
중앙대	5	80	40
창원대	5	200	186
한남대	2	80	42
한양대	5	120	67
호서대	5	160	88
홍익대	5	200	111

* 경원대와 숙명여대는 '98 하반기 개강임.

형성되다 보니, 정작 선정된 기관들마저도 선정되지 못한 기관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개별적인 광고를 자제해야 했다. 이같은 연유로 교육 수요자들에 대한 홍보가 사실상 충분하게 이루어 질 수가 없었고, 대부분의 기관들이 모집 정원에 비해 예상 외로 저조한 수강생밖에는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점은행제의 주된 실시 기관인, 각 대학 부설 사회교육원들의 수강 신청자는 모집 정원의 35% 수준이다(〈표 2〉 참조).

이처럼 낮은 지원율에는 홍보 문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작용한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① 우선,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 취득

희망자가 생각처럼 그리 많지 않거나,

② 교육 대상자들이 독학사 운영 과정에 서처럼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향후를 관망하고 있다는 점,

③ 최근의 경제 위기가 저조한 지원율을 가져 왔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학점은행제 실시 기관 담당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교육부나 한국교육개발원에 직접 문의를 해야 했고, 관련 부처에서는 이들 문의에 많은 시달림을 받았다. 따라서 하루 속히 실시 기관 담당자들에 대한 연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제도가 정착되는 단계까지는 학점은행제에 대해 지역별 설명회를 열어 수요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향후 이 제도의 보급과 확산을 기해야 할 것이다.

3)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의 재정적 부담

앞서 지적한 수강생들의 저조한 등록률은 곧바로 사회교육원 운영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연결된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건국대 사회교육원의 경우, 1학점당 6만 원인 과목에서 시간당 5만 원인 강사료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4명 이상이 등록해야 가능하다. 이러한 계산은 학점은행제 실시에 따른 건물이나 부대 시설의 감가상각 비용, 기타 부대 인건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이들 비용을 포함시킨다면 한 강좌당 최소 20명 이상은 수강생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년 시범 실시 기간에 교육부가 대학 사회교육원들에게 인가해 준 '기관당 5개 교과목'을 개설한 경우, 기관별로 학점은행제 등록생이 최소 100명은 넘어야 운영상의 손익 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앞의 〈표 2〉에 나타

난 것처럼, 지방자치 단체인 창원시로부터 과목당 수강생들에 대한 교육비 보조를 별도로 받고 있는 창원대와, 학점은행제 수강생을 별도의 반으로 하지 않고 기존 사회교육원 수강생들과 혼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홍익대의 경우를 제외하면, 현재 손익 분기점이 되는 학점은행제 등록생 100명을 넘는 기관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교과목 수가 늘어나고 실시기관 수가 대폭 확대되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처럼 전망이 어두우므로 학점은행제 실시 기관들은 수강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부 전공 교과목들의 설장을 꺼릴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위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 수강 기회를 제약받게 되어 수강생들의 불만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학점은행제를 실시하는 대학 사회교육원들이 수익 사업 차원에서 이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대학들이 처한 재정상의 어려움 속에서 '사회봉사' 차원의 적자 운영을 언제까지나 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상태로는 학점은행제의 실시는 사회교육기관 운영의 적자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4) 교과목 연결 체계의 미흡

'98학년도 1학기 현재, 교육부가 학점은행제 시범 실시 기관들에 승인해 준 교과목은 168개 과목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이 교과목들에 대한 수강생들의 선택 폭이 생각처럼 넓지가 않다. 다양한 교육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조 체계의 구축을 위해, 학습 경험의 수직·수평적 차원의 교류 확대와 인적·물적 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학점은행제의 근본 취지와 발상은

좋은 것이었다. 그러나 학습자에게는 학기가 바뀔 때마다 이 기관 저 기관을 학점 이삭줍기 식으로 찾아 다녀야 한다는 점이 커다란 불만 요인이다. 더구나 먼저 수강하는 기관과 다음 기관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직업활동과 학업을 함께하고 있는 대부분의 늦깎이 수강생들 입장에서는 학업에서 오는 부담보다는 새로운 학습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과 교통의 불편함에서 오는 부담이 훨씬 크다고 한다.

바람직하기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학위 과정이 정해지고, 또 그 과정 이수에 필요한 표준 교육과정이 마련되고 난 후에는, 표준 교육과정상에 제시된 교양 교과목과 전공 교과목들이 기관별로 폭넓게 설장될 수 있도록, 교과목 분산 계획이 학점은행제 주관 부처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각 기관들로부터 개설하고 싶은 교과목들을 신청 받아 승인해 주는 방법을 택하다 보니 앞서 지적한 대로 교육 수요자들의 교과목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교육부가 제시한 표준 교육과정 가운데 기관별로 개설 교과목들을 조정하여 수강생들의 선택 폭을 넓혀 주어야 할 것이고, 가능하다면 교육 수요자들에게 '교과목 수요도'를 조사하여 실시 기관들로 하여금 수요도를 예측하지 못하여 저조한 지원률로 인한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교과목 구성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점은 현재 학점은행제의 표준 교육과정이 국내 대학들의 교육과정 가운데 10개 대학 이상에서 공통적으로 개설하고 있는 과목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표 3) 학점은행제 실시 기관의 학점당 수강료

기 관 명	학점당 수강료	비 고
○ 건국대 사회교육원	6만 원	
○ 경원대 사회교육원		다음 학기로 연기
○ 계명대 사회교육원	8만 원	
○ 광운대 전산사회교육원	7만 원	
○ 단국대 사회교육원(천안)	9만 원	
○ 대구대 사회교육원	12만 원	
○ 덕성여대 평생교육원	7만 원	
○ 명지대 사회교육원	10만 원	
○ 서강대 국제평생교육원	8만 원	
○ 서원대 사회교육원	4만 원	과목당 16만 원(64시간 강의)
○ 세종대 사회교육원		다음 학기로 연기
○ 성균관대 사회교육원		기존 사회교육과정과 연계
○ 수원대 정보사회교육원	6만 원	
○ 숙명여대 평생교육원		다음 학기로 연기
○ 영진전문대 사회교육원	5만 원	
○ 인천교대 사회교육원	6만 원~7만 원	
○ 전북대 사회교육원	5만 원	
○ 전주대 사회교육원	9만 원	
○ 주성대 사회교육원		다음 학기로 연기
○ 중앙대 사업교육원	7만 원	
○ 창원대 평생교육원	5만 원	창원시에서 수강료 지원
○ 한남대 외국어지역사회교육원	5만 원	
○ 한양대 사회교육원	7만 원	
○ 호서대 사회교육원	9만 원	
○ 홍익대 미술·디자인교육원	20만 2천 원	

연유로 사회 변화와 고용구조 변화에 따라 새롭게 창출되는 분야의 전공보다는 기존의 대학들이 양산해 내고 있는 분야에 더하여 동일한 전공자들을 다시금 배출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같은 현상은 사회교육기관들로 하여금 사회적 수요가 있는 새로운 전공 분야를 신설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5) 기관마다 다른 학점은행제 수강료

학점은행제가 처음 실시되면서 등록생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일 가운데 하나는 수강료 책정의 문제였다. 동일한 교과목, 동일

한 학점 수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마다 등록금 액수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다. <표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대학에 따라 학점당 적게는 6만 원에서 많게는 12만 원까지 어떤 경우에는 무려 2배에 해당하는 수강료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교육비가 천차만별한 것은 관계 당국으로부터 가이드 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교육기관들이 나름대로의 여건에 맞춰 교육비를 책정한 결과다. 이로 인해 결국 운이 좋은 수강생들은 값싼 등록금을 내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 불행하게도 비싼 등록금이 책정된 곳에 등록을 한 학생의

경우는 동일한 교과목, 동일한 학점을 취득하면서 배나 되는 등록금을 내야 하는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더구나 수강생들이 사전에 각 기관별 등록금을 비교하여 등록금에 차이가 있더라도 본인이 원해서 신청했다면 별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사전 참고하거나 비교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기관마다 동일한 것으로 알고 등록한 수강생들은 피해를 입게 된다. 이같은 등록금의 격차는, 늦었지만 다음 학기부터라도 교육 수요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정 액수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6) 향후 예상되는 문제들

학점은행제에 관한 수강생들의 최대 관심사는 언제쯤에 최초의 학위 취득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현업에 종사하면서 매학기에 두 과목 6학점 정도를 지속적으로 수강할 경우 현재의 체제에서는 140학점을 취득하는 데 11년 이상이 걸린다. 그리고 한 학기에 3학점짜리 3과목을 수강하고 모든 과목을 70점 이상 받아 낙제 과목 없이 학점을 취득할 경우, 약 8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학기당 9학점을 8년 동안 수강한다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로 생각된다. 더구나 이같은 가능성 역시 현행 체제 아래에서는 표준 교육과정에 제시된 모든(혹은 대부분) 교과목들이 매학기 수강이 가능한 지역의 기관에서 교과목들간의 요일별 수업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특히 전공필수 교과목들이 학습자가 수강 가능한 요일에, 통학 가능한 기관에서 운영된다는 보장이 없는 한, 미래 어느 시점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인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대학

3학년을 수료하고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나머지 30~40학점 정도를 취득하여 졸업하고자 할 경우, 이론상으로는 1년 남짓한 시간이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자신의 전공 분야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곳을 찾아 수강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할 것이고, 남은 교과목들이 어느 기관에서 언제 개설될 것인가는 지금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 이는 결국 학점은행제 과정별로 승인된 제도가 아니라, 낱알의 교과목 단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라 하겠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향후 학점은행제 실시 기관수를 대폭 늘려주고 개설 교과목들도 상당수 늘려 나가도록 독려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부로부터의 승인 여부보다는 실시 기관의 경영상의 여건과 관련하여, 소수의 학습자들이 등록하는 세분화된 전공 교과목에 대해 대학이 어느 정도 적자를 감수하면서 개설해 줄 수 있을 것인가이다. 다시 말해서 시범 실시 기관 선정 시에는 교육부가 선발 권한을 가지고 신청 기관들을 심사였으나, 향후 교육 수요자들이 전공 이수를 위해 필요로 하는 세분화된 많은 교과목들을 실시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도 교육부가 학점은행제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해, 소규모 수강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상의 적자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한, 신청자가 소수로 예상되는 전공 교과목들의 수강료는 상당 부분 인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학위 취득에 필요한 140학점 가운데 135학점을 취득하고도 졸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충분

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학점은 행 제 아래에서는 이미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해당 전공과목을 35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 교과목들이 어느 기관에서 언제쯤 개설되어 학위 취득이 가능하게 될 것인가는 현재로서는 막연하다. 결국 '제도상 주어진 선택과목 속에 현실상 주어지지 않는 선택교과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 문제다.

3. 맺는 말 : 발전을 위한 제언

1) 기간 단축을 위한 집중과정 개설

한 학기가 끝난 현 시점에서 많은 수강생들의 궁금증은 지금과 같은 학점은행제 체에서 자신이 과연 언제쯤에나 기대하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직장에 다니면서 매학기 9학점씩 수강할 경우 8년을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학위취득이 가능하다. 이는 40대 혹은 50대가 되어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수많은 수강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장기적 목표가 아닌 단기간에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의 기술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의 일환으로 현재 각 대학이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여름과 겨울의 계절 학기 같은 형태의 강좌를 제안하고자 한다. 혹은 교육대학원에서 실시하는 계절제 학기와 같은 운영은 물론, 가능하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집중적인 강의를 실시하여 주말을 이용한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역시 고려해볼직하다. 결국 대학에서의 1학점

이란 주당 1시간씩 16주 동안 수강해야 하는 즉, 16시간의 수업인데, 예컨대 3학점 짜리 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48시간을 수강하면 된다는 것이다. 현재 학기 단위로 되어 있는 3학점짜리 교과목을 만약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4시간 수강하고 일요일에 8시간 수강한다면 주당 12시간으로 4주면 48시간의 수업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주말강의 제도'가 도입되면 16주로 되어 있는 현행 학기 체제에서 주말에만 학교를 다녀도 한 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일 년이면 24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주말강좌와 여름, 겨울의 계절학기 강의를 듣게 되면 개인의 수강 능력을 떠나 기간상으로는 3년 안에 140학점을 취득하여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2) 실시기관의 컨소시엄 형태 운영

현재의 교과목 승인제 대신에 전공 과정별 승인제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왜냐 하면 하나의 학사 학위과정을 위해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합하여 대략 50~60여 개 교과목의 개설이 필요한데, 일개의 사회교육원에서 만약 5개의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한다고 하면 결국 엄청난 수의 교과목들을 개설하고 강사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개개의 사회교육기관이 독자적인 학위과정을 운영하기보다는, 지역별 사회교육기관들이 연합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예컨대, 지리적으로 가까운 건국대, 세종대, 한양대가 서로 연합하여 5개 학위 과정을 운영할 경우, 교과목 개설을 교양, 전공선택, 전공필수 등으로 구분하여 역할 분담을

하고, 대신에 3개 기관의 등록금은 지원자 대비 다소간의 차등을 두어 배분하든지 공동관리하는 형태로 운영한다면, 교육 수요자들에게 편리한 제도로서 보다 체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컨소시엄 형태의 운영은 연세대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가 위치한 신촌 지역과 같은 '지역 벨트' 형태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대학들이 배출하는 인력만으로도 사회적 수요가 넘치는 분야보다는, 기존의 대학들이 배출하고 있지 않으면서 사회적 수요가 있는 분야의 인력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길러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테면, 영재교육 진흥법이 제정됨으로써 앞으로 이 분야의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로는 국내 어느 대학에도 영재교육 전공 과정을 개설한 곳이 없다. 이처럼 고용 구조의 변화나 시대 및 사회 변화에 의해 새롭게 출현하는 소위 '틈새시장'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었으면 한다.

3) 유연한 운영체제 확립

끝으로 학점은행제의 실시와 관련하여 주관 부처와 실시 기관 사이의 경직된 운영체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육부의

관련 부서나 한국교육개발원의 학점은행본부는 학점은행제 실시 기관을 선정할 때 그 기관이 자율적으로 학점은행제를 운영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고, 일단 승인된 기관은 학점은행제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교과목 담당 교수가 바뀔 때마다 변경 승인 요청을 해야 하고, 담당 교수가 사용하는 교과서조차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점은행제 주관 부처는 학점은행제 개설 과목의 교·강사 자격을 규정해 놓고 각 실시 기관으로 하여금 그에 준하는 교·강사를 채용하도록 하면 될 일이다. 이는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도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오성삼/건국대 농업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교육학 석사, 그리고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프로그램 평가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건국대학교 농업교육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사회교육원장을 맡고 있다. 『교육학의 이해』 등 4권의 공저와, "메타분석"에 관련한 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